

負의 經濟를 診斷한다

~國內外 經濟動向에 대한 分析 및
對策方向을 中心으로~

金 民 彩

〈慶熙大學校教授·經博〉

I. 世界經濟의 現段階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世界經濟는 지금 심각한 不況局面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불황은 제1차 석유파동이 물고 온 74~75년의 불황보다 한층 깊고 깊은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開發國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強勢通貨國과 弱勢通貨國에 따라서 경기진행의 양상은 각각 다르지만 대체로 말하여 1차파동 때에는 비용 구성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기업수지의 악화, 따라서는 投資減退를 초래한데 기인한 것이고 2차파동 이후의 불황은 장기에 걸친 인플레이와 불황이 전면적인 需要減退를 일으킨데 기인한 것이다. 1차파동 이후 해마다 인상조정되던 석유가격이 올해에는 오히려 인하해야 할 만큼 파잉생산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늘의 세계경기의 深度를 충분히 말하여 주고 있다.

76년부터 78년 사이에 세계경제가 일단 회복되었다가 79년의 2차석유파동으로 인하여 또 다시 後退局面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계경제를 長期循環의 관점에서 관찰할 때 두개의 불황은 하나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세계경제는 70年代 이후 장기순환의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世界景氣를 전망하고 그 대책을 세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종래 세계경기를 점치는 많은 研究機關들이 반드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고는 말할 수 없다. 장기순환의 하강국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이상의 긴 기간에 걸치는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一般景氣循環은 몇차례의 호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므로 자칫하면 우리는 호황의 밑바닥을 흐르는 장기적 침체세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경기동향을 살피기 위하여는 綜合景氣指標를 검증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나 보통은 失業率을 가지고 이에 대신한다. 실업률은 경제의 활동수준을 가장 빠르고 직감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GNP成長率을 가지고 경기지표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GNP는 氣象의 악조건으로 인한 농업의 흉작과 같은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980년의 우리나라의 經濟成長率은 마이너스 5.7%로 일찌기 유례없는 최저의 성장기록을 보였는데 이것은 농업부문에서 마이너스 25.7%라는 大凶作에 기인한 것이었고 제조업부문은 마이너스 1.2%의 감퇴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장률만 가지고서 不況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70년대의 주요선진국의 失業率의 동향을 보면 別表와 같다. 미국에서는 1975년에 8.5%의 피크에 이른 실업률이 78년에 6.0%로 다소 떨어지는 듯하더니 80년 5월에 7.6%로 다시 악화되어 81년 5월현재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76년에 5% 수준으로 올라간 실업률이 80년 11월에는 8% 수준을 그리고 81년 4월에는 드디어 10% 수준을 넘어섰다. 실

主要先進國의 失業率 (單位: %)

	美國	日本	西獨	英國	캐나다	이탈리아
1971	5.9	1.2	0.9	3.3	6.2	5.4
1972	5.6	1.4	1.1	3.7	6.2	6.4
1973	4.9	1.3	1.3	2.6	5.5	6.4
1974	5.6	1.4	2.6	2.6	5.5	5.4
1975	8.5	1.9	4.7	3.9	6.9	5.9
1976	7.7	2.0	4.6	5.3	7.1	6.7
1977	7.1	2.0	4.5	5.8	8.1	7.2
1978	6.0	2.2	4.3	5.7	8.4	7.2
1979	5.8	2.1	3.8	5.4	7.5	7.7
1980	7.1	2.0	3.8	5.8	7.5	7.6

업률이 3%만 되어도 政權이 바뀐다는 영국에서 10%를 넘어서자 마침내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 전체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70年代末에 약간의 경기회복이 엿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1次석유파동 이후 각국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높은 失業率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바로 장기순환의 침체국면의 영향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국면에서는 對症療法로서의 경기정책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은 장기침체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에 대한 요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인플레이와 不況 그리고 國際收支의 赤字, 이것이 70년대 이래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難題들이다. 이 세가지 달레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오늘날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언필칭 그 원인을 석유가격의 폭등에 돌리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石油波動은 결코 장기침체의 원인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60年代 장기번영기간을 통한 消費革命, 각국의 경제개발의 급진전에 따르는 過剩流動性, 기술개발의 지체에 따르는 生産性의 전면적인 저하, 70年代의 장기침체는 60年代에 준비된 이러한 현실의 필연의 귀결이었으며 석유파동은 그 極限時點에서 폭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장기침체의 원인 자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技術開發의 정체는 生産성의 전면적인 저하를 가져

오고 이것이 70年代의 장기정체의 본질이라는 것이 일부 식자들에 의하여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不況을 극복하는 유일의 길은 기술개발을 서두르는 일이다. 生産성의 상승이 生産費의 상승을 앞지를 때 비로소 인플레이도 멎고 不況도 해소될 것이며 國際收支도 개선될 것이다.

II. 世界景氣展望

그러면 장기순환은 언제쯤 상승세로 전환될 것인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에 80年代 후반이나 아니면 90年代 초에는 세계경제는 새로운 장기적 상승 무드를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이면 지금 진행중인 제3차 産業革命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3차 産業혁명이란 IC(半導體)를 중심으로 하는 電子工學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을 말한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 분야의 발전은 종래의 生産방법과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로보트에 의한 人間勞動의 대체, 컴퓨터에 의한 事務自動化,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신제품의 출현. 이 모두가 生産성의 비약적인 향상, 市場의 끝없는 확장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제3의 産業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IC를 未來의 原油라고 말한 사람도 있는데 이 말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바로 이 분야에 있다는 것을 뜻함이다.

로보트가 전면적으로 生産工程에 도입되고 O A혁명이 한층 진행한다면 大量失業이 발생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실 최근에 ILO는 선진공업국에서 사무자동화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事務職의 실업자수를 예측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杞憂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로 生産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동일한 報酬제 밑에서 노동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둘째로 投資의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제는 2차대전 후에 生産공정이 자동화되고 經營革命이 불어닥쳤

을 때에 우려되었던 바와 꼭 같은 관계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투자와 소비가 낮은 수준에 있는 장기침체의 국면에서 로보트나 OA와 같은 기술의 도입이 부분적으로 실업을 유발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간의 현상일 뿐, 기술혁신이 보편화됨에 따라 급속도로 해소될 것이다. 되풀이 하거나 그것은 생산성의 상승이 利潤率을 개선하여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 1차 석유 디플레는 投資不況이었고 두번째의 그것은 消費不況이었다. 전자는 유가등귀로 인한 물가상승이 賃金引上을 강요한 결과 利潤率이 떨어지고 따라서 자본축적이 감퇴된데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사실 1965년에 13.7%이던 미국의 이윤율(稅控除前)이 1975년에는 6.9%로 떨어졌고 영국, 西獨, 일본의 이윤율도 1960년에 각각 14.2%, 23.4%, 19.7%이던 것이 1975년에는 각각 3.5%, 9.1% 및 9.5%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자본축적이 크게 둔화된데다가 인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이 겹쳐서 投資活動은 결정적으로 저조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투자의 감퇴는 소득의 감퇴를 가져오고 이것은 차례로 소비의 감퇴를 일으켜 여기에 長期沈滯는 본격화된 것이다.

70년대 후반에 세계경기가 잠시 회복된 것은 미국의 擴張政策에 힘입은 바 컸다. 즉 미국은 국제수지에서 거액의 적자를 내더라도 경기를 자극시키기 위하여 總需要의 확대정책을 썼던 것이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미국 이외 나라들의 국제수지 개선을 의미하므로 이것이 세계경기의 회복에 기여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경제를 機關車에 비유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수지의 赤字累增을 방임하는 정책을 쓴 것은 하나의 戰略이었다. 즉 이 정책에 의하여 달러貨가 세계에 많이 흩어질수록 變動換率制 밑에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므로 결국에 가서는 국제수지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달러放任政策에 대하여 비난의 여론이 분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不況對策으로서 총수

요확대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가 조장되고 또 달러가치의 하락은 輸入物價의 상승, 따라서 인플레이의 촉진을 유발하여 달러切下에 의한 수입억제, 수출증진의 효과를 상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러의 가치저락은 產油國에게 油價引上의 구실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70年代말에 이르러 미국은 또 다시 달러 방위를 위한 긴축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高金利정책은 이것을 반영한 것인데 미국은 달러放任政策을 써도 공격을 받고 달러放衛政策을 써도 공격을 받는 셈이다. 지난 7월 오타와에서 열린 西方7개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고금리정책에 대하여 각국 수뇌들의 항의를 받은 레이건大統領은 “그것은 현 美행정부가 물려받은 經濟難의 한 현상일 뿐, 현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구성요인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미국의 금리가 크게 변동하기 시작한 것은 79년 10월 이후의 일이므로 레이건의 해명에 전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의 미국의 高金利정책이 레이건 행정부의 經濟再建政策과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레이건大統領의 정책은 작은 政府로의 환원, 減稅에 의한 국민부담의 경감과 저축의 장려, 민간기업에 대한 投資意慾의 고취, 인플레이션의 억제, 산업의 재생, 군비확충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하여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에 발표한 「經濟再建計劃」에서 이러한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金融政策은 머니타리스트로부터 감세정책은 서플라이 사이드 경제이론에서, 정부지출의 삭감은 전통적인 古典經濟學에서 그리고 각종 규제 철폐는 케인즈 이외의 모든 경제학에서 얻어 왔다는 것이다. 오늘의 미국경제가 직면한 시대적 난국을 종래의 케인즈적인 財政政策만으로써는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發想인 것이다.

고금리정책은 이러한 경제재건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과정처럼 보인다. 첫째로 主要短期金利를 20%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투기적 자금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 기대를 단절하자는 단호한 결의로 풀이된다. 적어도 인플레이가 다분히 투기적 현상이고 또 인플레이의 억제가 경제정책의 제 1의 목표라면 다른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인플레이 마인드를 제거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둘째로 고금리가 달러貨의 가치를 높여주는 한 그것은 미국의 국제적 地位向上에 기여한다. 國力과 通貨價值와의 사이에 正의 관계가 있다면 「강력한 미국」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레이건정부로서 고금리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달러의 放任時代는 바로 미국의 國威失墜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미국의 고금리정책은 미국 이외의 나라들, 특히 弱勢通貨國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달러貨의 강세는 국제통화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 각국은 자국통화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外換市場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保有外換의 상실을 의미하며 만약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는 바 이 때에는 不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물론 자국화의 平價切下는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石油 등 수입 물가를 높여 새로운 인플레이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세계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다. 미국의 정책당국에 따르면 金利는 연내로 인하조정되어 명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즉 이것은 미국의 回生政策이 연말부터 서서히 그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경제가 회생되어 다시 한번 기관차의 구실을 한다면 世界經濟는 호황의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시기는 역시 技術革新이 주동적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아마도 80년대 후반의 일일 될 것이다.

Ⅲ. 韓國經濟의 現況

그동안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큰 시련을 겪었다. 1974년 1차파동 때에는 都賣物價 42.1%, 消費者物價 24.3%라는 파격적인 물가고 속에서도 8%의 성장을 유지

할 수 있었으나 80년 2차파동 때에는 도매물가 38.9%, 소비자물가 28.7%라는 이것 또한 일찌기 보기 드문 물가고 속에서 경제활동은 전례없는 低調를 보였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의 경제성장 -5.7%는 주로 농업의 흉작에 기인한 것이지만 GNP의 83%를 차지하는 2차산업 및 3차산업의 成長率도 각각 1.2% 및 0.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주로 內需의 감퇴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수요는 -0.9%, 투자수요는 -24.3%를 시현하였다. 약 1%의 소비지출의 감소는 75年不變價格으로 약 1천억원의 감소를 의미하고 24%의 투자지출의 감소는 약 1조1천억원의 감소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販賣量의 일방적인 증가만을 맛보아오던 기업가와 상인이 현상유지는커녕 매상이 줄 때에 이것이 바로 불황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感覺景氣의 정체인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商品輸出과 建設輸出이 호조를 보여 11.9%의 성장을 달성한 바람에 경기의 그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건 등등으로 인하여 올들어 경기는 점차로 회복세로 들어선 것 같다.

지난 上半期 중의 경제동향을 보면 80년 동기에 비하여 GNP는 2.7% 증가하여 플러스로 전환됐다. 특히 5.2%의 2차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이것은 2.7%의 總消費 증가와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3.6%의 증가에 불과했던 總輸出이 올 상반기에는 무려 21.1%나 크게 성장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固定投資는 작년 상반기의 11.9%의 감소에 이어 올해에도 10.4%나 떨어지고 있어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아직도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작년의 指數가 거개 마이너스였으므로 올들어 다소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景氣回復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경기지표에 의하여 보기로 하자. 한국은행은 景氣豫告指標라는 것을 작성하여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景氣調整政策의 발동과 해제의 필요성을 신호등으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책집행을 자동적으로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綜合平均指數가 2.0 이상이면 赤信號인데 이것은 경기가 과열상태에 있으므로 긴축정책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1.0 이하이면 靑信號로서 이것은 완화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신호이다.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오르는 이미 79년 8월의 일이다. 즉 이때의 豫告指標은 1.0 이었고 이래 계속 떨어져서 80년 5월에 0.4로 되어 10월까지 6개월간 이 최저수준이 지속되었다. 11월에 이르러 예고지표는 0.5로 개선되기 시작하여 이후 12월 0.6, 81년 2월 0.7, 4월 0.8, 그리고 6월에 드디어 1.0으로 23개월만에 원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한편 經濟企劃院이 작성하는 景氣綜合指數에 따르면 이번 불황의 저점은 80년 6~9월이고 이후는 점차로 회복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두 지표를 종합할 때 80년 3·4분기에 불황의 고비는 넘겼고 그후 경기는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대체로 경기의 下降과정에서는 소비재보다 生産財의 생산이 더 빨리 감소하고 반대로 회복과정에서는 소비재의 생산이 생산재에 앞서서 증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원칙은 작금의 우리나라 경기과정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1년 상반기의 國內固定資本形成은 10.4% 감소하였다. 고정 투자가 이 정도의 감소에 그친 것은 政府建設投資가 15.1%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民間建設投資는 무려 23.9%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住宅 및 非住居用建物에 대한 건축투자는 국내 고정투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투자는 1977년에 34.9%, 78년에 36.6%, 79년에 35.4% 그리고 80년에는 30.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건축부흥을 일으키는 일은 경기회생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建築景氣는 경기회복의 최종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결코 경기를 先導하는 구실을 할 수는 없다. 이 까닭에 建築循環은 일반경기순환보다 더 긴 17~20년의 주기를 갖는 것이다.

건축순환의 주기가 이처럼 긴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주택은 消費

財임과 동시에 投資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비재로서의 주택은 매우 고가인 까닭에 소득이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불경기 때에 建築活動이 한산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투자재로서의 주택은 가격상승의 전망이 흐려 이 이상 投機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황시기에 이에 대한 投資가 둔화되는 것도 또한 마땅하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주택부흥이 일었던 것은 住宅需要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후자 즉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건축투자는 다른 산업에 대한 聯關效果가 크기 때문에 景氣浮揚의 주수단으로 되기 쉬우나 이것이 앞뒤가 뒤바뀐 생각임을 알 수 있다. 건축의 연관산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시멘트산업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東洋, 雙龍, 韓一, 現代, 亞細亞, 星信 등 6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가동률은 80년 62%였는데 올 상반기에는 이보다 더 떨어져서 47%에 그쳤다고 한다. 가동률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內需販賣의 부진과 油價·運賃 등 원가상승의 압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올 상반기의 내수판매실적은 총 5백 60만 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하여 13% 줄었는데 이래로 간다면 올해 內需總量은 전체 공급능력 2천 4백 50만톤의 49%선인 1천 1백 5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개업체의 상반기 經營赤字는 3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 밖의 연관산업도 마찬가지로 유추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建築경기 of 부양에 정책의 전부를 건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어떤 정책이 취해졌는가?

Ⅳ. 景氣對策의 有効性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에 靑信號가 오른 것은 79년 8월이었는데 신호등대로 한다면 이때에 이미 緩和政策을 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후퇴의 직접동인은 바로 조금 전인 7월 10일에 있었던 59.2%의 油價引上과 더 소급해서는 4·17 經濟安定化施策에 있었으므로 조금히 긴축정책을 풀 경제환경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10·26 사건이 일어나서 政治的·社會的不安이 가

세되어 경기침체는 점점 심화되어 갔는데 景氣豫告指標가 0.4로 떨어질 때까지 경기회복정책은 사실상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80년 6월 5일에 가서야 제 1차경기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總通貨增加率을 20%에서 25% 확대한다.
- ② 一般貸出金利를 1%, 단자회사 어음할인金利를 1.5%, 會社債金利를 2%씩 각각 인하한다.
- ③ 輸出支援金融을 달러당 507원에서 525원으로 인상한다.
- ④ 수출금융금리의 인상계획을 유보하고 현행 12%선을 유지한다.
- ⑤ 關稅徵收 유예제도를 81년 6월까지 연장한다.
- ⑥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1천억원 증액한다.
- ⑦ 유보된 3천억원의 예산중 土木 및 건설사업 중심으로 1,127억원을 해제한다.
- ⑧ 재정자금 250억원을 추가공급, 서민용 賃貸住宅을 1만戶에서 1만 7천戶로 확대하고 금융자금 4,335억원으로 3만 5천戶의 주택을 추가건설한다.
- ⑨ 營農資金 잔여분 1,01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이와 같은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80년의 經濟成長率이 당시의 추정치 0~2%보다 높은 3~4%에 이르고 失業率은 그때의 6%에서 5~5.5%로 떨어지며 도매물가는 35~39% 오르고 經常收支赤字는 6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서 어지간히 들어맞은 것은 물가예측 뿐이다. 80년말 현재 실업률은 6.3%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80년 9월 16일에 이른바 經濟活性化方案이라고 불리는 제 2차경기대책이 취해졌다. 이것은 주로 부동산의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讓渡所得稅率을 낮추고 금리를 하향조정하며 수출지원금융액을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 ① 不動産의 讓渡所得稅率을 2년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현행 70%에서 50%로, 2년이후는 50%에서 40%로 그리고 未登記轉賣시는 80%에서 75%로 내리는 한편 年10%의 物價上

昇率控除를 인정한다.

- ②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2백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1천억원의 福祉住宅賦金貸出을 풀며 土地開發公社에 토지매입자금 3백억원을 추가공급 한다.
- ③ 預貸金利를 평균 2%씩 인하하고 預金支給準備率을 저축성예금의 경우 11%에서 10%로 요구불예금의 경우 20%에서 14%로 인하한다.
- ④ 수출금융의 달러당 지원액을 현행 평균 525원에서 540원으로 인상한다.
- ⑤ 수입생활필수품의 基本關稅率을 평균 50% 내린다.

*** 생활의 지혜 ***

◆ 대낮에도 졸릴때

밤잠을 다 자고도 대낮에 졸리는 것은 비타민 B₁의 부족 때문. 또 다리가 무겁고 부은 듯하며 장딴지가 땅기는 듯한 둔통까지 느끼고 무릎을 쳐도 무릎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어깨와 등이 빠근하고 피로해지는 증세 역시 비타민 B₁의 결핍 때문

이럴 땐 주식을 보리밥이나 현미로 바꾸고 간·돼지고기·달걀 등을 많이 섭취하면 좋아진다.

◆ 어지럽고 손발떨때

갑자기 일어서면 현기증이 나거나 손발이 차서 잠이 잘 안오는 것은 가벼운 빈혈 증세.

이런 증세는 단백질·철분·비타민 C·D복합체 등의 부족으로 생긴다.

이런 때는 간·달걀·어육류 등의 동물성 식품과 시금치·당근·풋고추 등의 녹황 채소 및 감귤류 등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이러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경기예고지표는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0.4의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家電業體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마저도 倒産의 일보직전에까지 물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11월 8일에 제3차경기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소비촉진과 企業救濟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즉

① 預金金利를 2.5%, 貸出金利를 2% 인하한다. 따라서 정기예금(1년)의 금리는 19.5%, 일반대출금리는 20%로 된다.

② 80년 總通貨增加率을 25%에서 27.6%로 증가한다.

③ 家電製品, 小型乘用車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을 앞으로 6개월간 현행보다 30% 인하한다.

④ 평소 건전한 기업으로서 在庫압박, 자금난이 심한 업체에 대하여는 연내 1천억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⑤ 철근 등 재고가 많은 部品 및 원자재와 일부 耐久消費財에 대하여 연말까지 3~5백억원의 범위내에서 實需要者金融을 제공한다.

⑥ 老朽보일러의 개체자금으로 2천억원을 방출한다.

⑦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土地債券을 발행하되 연내에 5백억원을 추가하고 81년도에 2천억원을 발행한다.

「11·8 經濟活性化를 위한 財政金融對策」이라고 불리우는 이 조치를 볼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지점에까지 와 있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국자는 말하기를 “기업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경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限界點에 다다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도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을 요한다. 소비수요는 다소 호전된 김새를 보였다 치더라도 投資活動은 여전히 저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81년 4월 3일에 제4차대책으로서 「産業合理化 및 投資獎勵策」이 발표되었다.

① 80년말 현재 대출된 10조2천8백억원의 운영자금 중 시설자금으로 사용된 1조~1조5천억원을 최장 8년까지의 長期施設資金으로 貸換한다.

② 수출산업 시설자금, 중소기업 시설자금 및 國產機械 購入資金으로 年利 15%, 3년저치 5년상환 조건으로 3천7백억원을 추가공급한다.

③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치, 시멘트공업의 燃料代替시설,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한해 80년 7월 1일부터 81년 6월 30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投資稅控除制度를 적용했는데 이를 전체 제조업 및 광업에 확대적용한다. 稅額控除率은 국산기자재의 경우 투자금액의 10%, 외산 기자재는 8%이다.

④ 當座貸越, 短資金利, 會社債金利를 1%포인트씩 인하한다.

이 조치를 가리켜 매스컴은 私債凍結만 없는 제2의 8·3 조치(1972년)라 하였다. 不況과 負債 속에서 회생력을 잃은 기업을 구출해 보자는 최후 수단인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은 그후에도 계속 발동되고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에서의 工場建設 또는 移轉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投資業種 및 投資比率를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공장의 안정가동을 보장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建築景氣를 소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서 오는 9월 30일로 끝나는 양도소득세의 彈力稅率 적용기간을 8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또 국세청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정고시했던 「特定地域」을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하였다. 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별공제해 주고 있는 物價上昇率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資金出處조사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택자금도 대폭 증액하여 올 3·4분기 중에 작년 동기의 3백99억원의 3배에 달하는 1천1백9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81년 1~9월 사이에 풀리게 된 住宅資金은 2천4백92억원이 된다.

V. 앞으로의 政策方向

이상에서 80년 6월부터 81년 8월 사이에 취해진 景氣浮揚對策을 대략 정리해 보았다. 이대

책의 전개과정은 현하 우리가 겪고 있는 불황의 深度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자못 흥미가 깊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金利面에 있어서 80년 1월 12일에 定期預金金利 24.0%(1년이상), 一般貸出金利 25.0%로 인상된 금리가 11·8조치까지에 전자는 4.5%, 후자는 5.0% 포인트씩 각각 인하되었다. 이러한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金利水準은 1·12금리인상 이전의 수준보다 아직도 높다. 단기자금의 低利 장기금융으로의 貸換, 3천억원에 달하는 중화학 대출금의 元利金償還 유예 등, 실질상에 있어서의 기업의 혜택은 크나 이러한 정도의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의 자극을 주었는가는 의문이다. 세계적인 高金利 추세와 높은 인플레이의 과정에서 금리를 대폭 인하할 수 없다는 데도 일리가 있지만 적어도 경기회복이 제 1차적인 정책목표라면 金利는 더욱 과감하게 낮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通貨供給에 있어서 80년도 總通貨增加率は 당초계획 20%에서 27.6%로 증가되었으나 실제로는 26.9%가 증가한 2조 6천 5백 67 억원이 공급되었다. 그리고 81년 7월 말까지 역시 26.9% 즉 1조 3백 10 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통화량의 이러한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業界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한다. 불황기간 동안 기업은 많은 在庫를 안고 있으므로 이 재고가 처분될 때까지 신규투자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자금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負債償還에 우선 돌려질 것이므로 돈은 곧 流通界를 떠나고 만다. 정책당국은 設備의 개체, 확장 및 신규투자의 촉진에 안간힘을 쓰나 이것 또한 順理가 아닌 것이다.

세째로 稅制面에서도 많은 배려가 주어졌다. 부동산양도소득세율 및 특별소비세율의 인하, 投資稅控除制度의 확대 등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가 그것이다. 滯貨가 생기고 따라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불황국면에서는 제 1차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實需要者金融 및 消費者金融도 재조정 및 소비자극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나 消費稅率을 조정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이 기회에 특별소비세율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요망된다. 한때 국민간의 違和感을 이유로 칼러 TV의 방영이 보류되었으나 이제 家電業體를 구제하기 위하여 방영을 결행한 이상 이것을 특별소비세로 묶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구나 TV는 생활필수품이지 이 이상 특별소비품은 아닌 것이다.

네째로 이번 경기대책에서 가장 역점이 두어진 점은 건축경기의 측면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기에 撒布하여 土木工事를 일으키는 일은 적절한 처사이다. 주택자금도 민간업자에게 공여할 것이 아니라 住公으로 하여금 賃貸住宅을 광범하게 건설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경기후퇴가 왜 이다지도 깊고 회복이 더딘가에 대하여 약간의 사족을 붙여 두고자 한다. 이번 불황을 제기로 우리 경제의 脆弱性이 여지없이 들어났다. 대다수의 기업은 오랜 세월을 두고 튼튼히 쌓아올린 内部蓄積의 기초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특혜지원에 의하여 줄지에 구축된 구조물인 까닭에 조그마한 풍파에도 금방 흔들린다. 제조업의 경우 自己資本比率이 세계에서 최하위급에 속하는 17%(80년)에 불과하므로 불황이 닥쳐오면 금융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것은 大企業일수록 심하여 80년도의 자기자본비율은 16.5%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번 기회는 어느 모로 보든 轉禍爲福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경기변동의 波高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기업의 長期의安定性을 도외시키고 60~70년대처럼 物量의 팽창에만 주력한다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80년 9월 27일에 발표된 企業體質強化對策은 기업의 非業務用 부동산의 처분과 소유제한, 재벌의 계열기업정리, 특혜금융의 제한 등 기업의 自立度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이 조치가 불황의 한가운데서 취해진 까닭에 오히려 不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土地나 기업체를 정리한다고 하여도 불황시기에 願買者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